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4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거시경제 동향

2013년 9월 소비자동향지수

해외 농정 이슈

EU, 무역협상 진행 상황 등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녹색생활조사 결과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2014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4년 국가 예산안

1) 재정총량

○ [총수입] 370.7조 원(본예산 대비 △0.5%, 추경 대비 +2.8%)

- 최근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은 '13년 본예산 대비 +1.0% 수준에 불과(2013년 본예산 대비 +2.1조 원)
- 세외수입은 주식매각 계획 변경, 세입추계 현실화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보다 오히려 감소(36.9조 원 → 26.7)

○ [총지출] 357.7조 원(본예산 대비 +4.6%, 추경 대비 +2.5%)

- 수입 감소만 고려할 경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유지 필요

<2013-14년 국가 예산안 비교>

단위: 조 원, %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증가율	
	본예산	(증가율)	추경예산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총 수 입	372.6	8.5	360.8	5.0	370.7	△0.5	2.8
▪ 예 산	253.3	8.2	241.5	3.2	245.2	△3.2	1.5
(국 세)	216.4	5.2	210.4	2.3	218.5	1.0	3.9
▪ 기 금	119.3	8.9	119.3	8.9	125.5	5.3	5.3
○ 총 지 출	342.0	5.1	349.0	7.2	357.7	4.6	2.5
▪ 예 산	243.6	6.8	247.6	8.5	251.8	3.3	1.7
▪ 기 금	98.3	1.0	101.4	4.2	105.9	7.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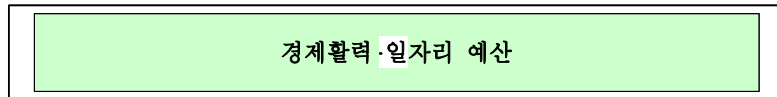
2) 예산안의 중점사항

- 경제활력 회복·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 「국민·현장·협업」 중심의 재정운용

<2014년 국가 예산안 중점 사항>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
- 경제활력 회복 - 성장을 이끄는 복지	- 국정과제 뒷받침 - 지역공약 이행

경제활력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지방재정 확충, 지역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 강화
서민생활 안정 삶의 질 제고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국민안전 든든한 정부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 안보·외교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정부 3.0 추진

전전재정 기반 확충	재정운용 개선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예산낭비 방지, 세입기반 확충	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운용 '국민·현장·협업' 중심 소통 강화

□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1) 2014년 예산규모

○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18조 5,871억 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

※ 추경예산 대비 1.4% ↓

- (농업·농촌) 14조 613억 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0% ↑

- (수산·어촌) 1조 8,658억 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 ↑

- (임업·산촌) 1조 8,886억 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0.3% ↓

- (식품업) 7,839억 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1% ↑

<2013-14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비교>

단위: 억 원

구 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비 고
	본예산	추경예산		
■ 농업·농촌	139,239	142,931	140,613	· 농업 직불금(10,511 → 12,053)
■ 수산·어촌	18,342	18,619	18,658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2,231 → 3,059)
■ 임업·산촌	18,941	19,112	18,886	· 산림재해 예방(4,650 → 5,081)
■ 식품업	7,339	7,839	7,714	· 수출식품 원료구매(3,871 → 4,200)
합 계 (이차보전 포함 시)	183,862	188,501	185,871	1.1% 증가 (2.9% 증가)

2) 주요내용

○ [직접지원 예산] 전년대비 10.2% 확대(5.1조 원 → 5.6)

- 농수산업 직불금(1.1조 원 → 1.2), 재해보험료 지원(2,090억 원 → 2,821)
등 농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

-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연 최대 42.7만 원 → 45.9),
농어촌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 등 농어민의 노후보장 강화

○ [시장개방대책 지원] FTA 등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

-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은 전년대비 14.2% 확대(2.6조 원 → 3.0)
※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3) 980억 원 → ('14안) 1,710
- 친환경·안전 농수산물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으로의 진출 적극 지원(5,493억 원 → 6,479)

○ **[신성장동력 창출]** 농수산업 6차산업화 및 첨단산업화 투자·지원 확대

- 농수산업(1차)과 가공·유통·관광산업(2차·3차)간 연계 활성화(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성장활력 제고(신규내역 520억 원)
- 종자개발 등 R&D 확충(9,532억 원 → 10,185) 및 ICT 융복합 시설보급(신규내역 186억 원)을 통해 농수산업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

○ **[농어가 소득 증대]**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 유기질비료 지원(290만 톤 → 320), 농촌용수 수질개선(229억 원 → 307), 친환경축산단지 신규지원(시범 3개소) 등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확충(84개 → 160) 및 어·패류를 동시 양식 가능한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신규지원(3개소)

○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비축물량 확충, 도매시장 혁신 등

- 국내산 양파무 신규 비축 등 김장채소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2.6만 톤 → 5)하여 단기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직거래 매장 등 新유통경로 확충(347억 원 → 397),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696억 원 → 1,279) 등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 혁신 지원

○ **농림수산분야 재해대응 시스템 지속 확충**

- 산사태·병해충 방지(4,650억 원 → 5,067), 적조 예방대책(신규 41억 원) 등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 대비 사전 대응능력 강화
-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속 보강(1.3조 원) 및 신속한 사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0.2조 원 → 0.3) 등 확충

〈2013-14년 분야별 예산안 비교〉

단위: 조 원, %

구 분	2013예산		2014년 예산안	증가율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 총지출	342.0	349.0	357.7	4.6
1. 보건·복지·고용	97.4	99.3	105.9	8.7
※ 일자리	11.0	11.2	11.8	7.7
2. 교육 (교부금 제외)	49.8 (8.7)	49.9 (8.8)	50.8 (9.5)	2.1 (9.4)
3. 문화·체육·관광	5.0	5.1	5.3	5.7
4. 환경	6.3	6.5	6.4	1.5
5. R&D	16.9	17.1	17.5	4.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5 (6.6)	16.7 (7.9)	15.3 (7.0)	△ 1.7 (5.4)
7. SOC	24.3	25.0	23.3	△ 4.3
8. 농림·수산·식품	18.4	18.9	18.6	1.1
9. 국방	34.3	34.5	35.8	4.2
10. 외교·통일	4.1	4.1	4.2	2.1
11. 공공질서·안전	15.0	15.2	15.7	4.6
12. 일반·지방행정	55.8	56.2	58.7	5.1

거시경제 동향

2013년 9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9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중 102, 전월대비 3p 하락**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심리지수1)	102	102	104	102	104	105	105	105	102
(전기 대비 지수차)2)	2.9	△0.6	2.5	△2.1	2.1	0.7	△0.2	0.2	△2.9
구 성	현재생활형편	0.7	0.2	0.2	0.0	0.3	0.0	0.5	△0.5
지 수	생활형편전망	0.7	0.0	0.4	△0.2	0.2	0.4	△0.2	△0.6
의	가계수입전망	1.3	△0.7	0.4	△0.3	0.0	0.0	0.0	△0.7
기	소비지출전망	△0.3	△0.3	0.9	△1.2	0.3	0.0	△0.3	△1.2
여	현재경기판단	0.0	0.2	0.3	0.1	0.4	0.3	0.0	△0.3
도	향후경기전망	0.5	0.0	0.3	△0.5	0.9	0.0	△0.2	0.4
(p)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2p, 3p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2p, 4p 하락**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8	89	90	90	91	91	93	91	89	(△2)
생활형편전망CSI	96	96	98	97	98	100	99	98	95	(△3)
가계수입전망CSI	101	99	100	99	99	99	99	99	97	(△2)
소비지출전망CSI	107	106	109	105	106	106	105	109	105	(△4)

주: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 77, 전월대비 4p 하락**
- **[향후경기전망CSI] 97, 전월과비 4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 95, 전월대비 4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 144, 전월대비 6p 상승**
- **[금리수준전망CSI] 97, 전월대비 1p 하락**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7	69	73	74	79	82	82	81	77	(△4)
향후경기전망CSI	90	90	93	88	97	97	95	93	97	(+4)
취업기회전망CSI	91	90	93	90	94	96	92	91	95	(+4)
물가수준전망CSI	141	137	138	136	135	132	133	138	144	(+6)
금리수준전망CSI	92	90	94	85	84	90	100	98	9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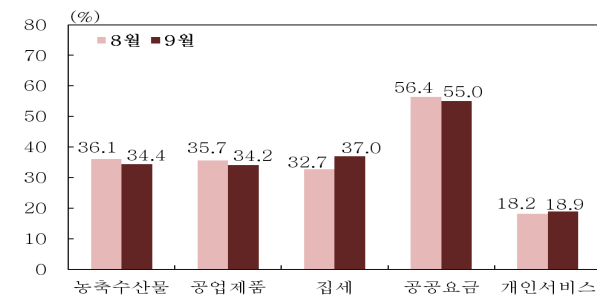
주: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 2.9%, 전월대비 0.1%p 하락**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된 품목**에 대하여 공공요금(55.0%), 집세(37.0%), **농축수산물(34.4%)** 순으로 응답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율〉



1. EU, 무역협상 진행 상황

□ 무역협상 요약

- **[EU집행위원회 무역협상 효과 강조]** 향후 세계 모든 수요의 90%는 EU 이외의 지역에서 생성되며, FTA 등 주요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 진행은 보다 **많은 시장기회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우선 시** 되는 요건
 -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상이 모두 완료될 경우, **EU GDP는 22% ↑**,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5억 유로 증가, 약 2만 2천명 고용창출**

□ 주요 협상

- **[미국]**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2013.7.8.~12일(워싱턴) 제1라운드 개최. 제2라운드는 2013.10월(브뤼셀) 개최 예정
 - **(기대 효과)** EU는 119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 1가구당 545유로 소득 증가
- **[일본]** 경제제휴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2013.4월 협상시작, 2013.6월 제2라운드 개최. 2013.10월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
 - **(기대 효과)**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2위의 무역 상대국으로, 동 체결로 일본으로의 수출은 30% ↑, EU GDP는 0.6% ↑, 40만 건의 비즈니스 창출
- **[ASEAN]** ASEAN지역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의 FTA 협상 진행 중, 싱가포르와 2010년부터 협상 시작, 2012.12월 FTA 협상 타결

□ 협상 예정

- **[중국]** EU-중국 투자보호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protection)을 위하여 중국과의 투자보호 협상 시작을 가맹국에 신청(5.23일), 쌍방은 이미 2012.2월에 개최된 제14회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진행 표명
 - ※ EU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¹⁾ (2009.12월)에서 배타적 권한으로 되어 있어, 독립투자협정으로는 최초

※ 자료: EUROPA(2013.08.01)

1)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임.

2. ASEAN-중국 경제장관회의, ACFTA 개정작업 보고

□ ASEAN-중국 경제장관회의 개요

- **[ACFTA 체결 및 경과]** 중국과 ASEAN은 2005.7월부터 ACFTA의 상품무역 협정 발효, 협정 체결이후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이 ASEAN과 FTA 체결
 - 동아시아에서 체결되고 있는 FTA 원산지규정의 주류는 부가가치기준²⁾ 중 '역내가치함유비율(Regional Value Content, RVC)³⁾ 40%와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CTC)⁴⁾ 4자리 중 하나 선택 가능
 - ACFTA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은 원산지규정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ACFTA 특혜관세 미적용
 - ※ ASEAN과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은 ASEAN의 역외국과의 FTA 중에서는 가장 먼저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 등 산업계 이용 난항

□ ASEAN-중국 경제장관회의 보고 내용

- **[무역활성화를 위한 과제]** ASEAN-중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산품 민감 분야(sensitive track)와 원산지규정 문제**
- **[TBT/SPS 의정서 발효 및 CPTF 최종 수속]** 2012.11.18일에 중국과 ASEAN으로 서명된 'ASEAN-중국 상품무역협정에 무역상기술장벽협정과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을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 (**TBT/SPS 의정서**)는 **2013.1.1일부터** 브루나이,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발효**

-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원산지 판정규정(rules of origin)의 근본원리가 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임.
- 3) 역내가치 함유비율이 얼마 이상이면 FTA 해당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방식. 집적법: 완제품 가격에서 역내산 재료의 가격 비중을 곧바로 구하는 방법; 공제법: 거래가격에서 수입산재료를 공제하여 역내산 원산지재료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순원가법: 제품의 순원가에서 역외산 재료비를 공제한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임.
- 4) 세번변경기준은 불완전세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한 종류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임.
- 5) TBT협정(무역상기술장벽협정):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 6) SPS협정(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CFTA 상품무역협정에 편입된 '세관수속과 무역 원활화' (CPTF)⁷⁾장에 대해 최종 수속 진행 중

- [AEM 점검사항 조기종결 촉구] AEM⁸⁾은 ASEAN-중국 간 무역 원활화 중요성 지적, 2014년 ASEAN-중국 경제장관회의 개최 전에 CPTF교섭과 공산품 민감 분야(sensitive track) 및 원산지규정 재검토 조기 종결 촉구
- [ACFTA, AHFTA 준비작업 보고] ASEAN-중국 경제장관회의에서는 AHFTA⁹⁾ 추진을 위한 ASEAN과 홍콩과의 준비작업 보고, AHFTA 2014년 초 교섭 시작 기대
- 통킹만(Tonkin bay)과 접한 환북부만경제협력을 위한 지침 책정을 위한 최종 작업 진행 보고, 관계 사무관에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촉진 하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한 프로젝트 계획 촉구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8.23.)

7) CPTF: Customs Procedure and Trade Facilitation.

8) ASEAN 경제장관회의: ASEAN Economic Ministerial Meeting.

9) ASEAN-Hongkong FTA.

3. 캐나다, CWB 및 전매제 폐지에 따른 업계 동향

□ 개요

- [캐나다소맥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CWB)]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구매자 독점(monopsony) 기관**으로 주로 캐나다 대평원지대의 생산자들로 부터 밀·보리를 **독점적으로 일괄 구매하여 국외에 되파는 역할 수행**
 - **(14명의 이사가 실질 운영)** BC주, 앨버타주, 새트캐처주, 매니토바주 밀재배 농가의 투표로 10명 선출, 4명은 연방정부가 지명. 밀과 보리 수송 및 유통망을 장악한 독점기업 폐해에 대항하기 위해 1935년 캐나다 의회를 통해 조직
- [밀 전매제 폐지]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보장**하여 **농가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캐나다 의회에 입법

□ 밀 전매제 폐지 1년의 영향

- [CWB의 고용자수 대폭 감소와 농협계약 축소] CWB에서 정리해고가 진행 되어 2013년 봄 기준, 기존 400명 이상이던 고용자 수의 **1/4 감소** 2012년 밀 거래가가 최고치였던 영향으로 CWB가 농협 계약으로 확보가능한 양이 예상치를 밑돌았음.
- [자유거래제로 이행] 캐나다 곡물업계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시장획득을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
- [곡물업계 신규참여 증가] 스위스의 자원상사 그레인 코어는 2012.12월, 캐나다의 리처드슨 인터내셔널, 아그리움과 공동출자로 캐나다의 곡물 유통 대기업 바이 테라를 매수
- [농가의 시장 정보 접근 난항] 동 체제 폐지에 따라 하기 기능을 유지할 조직의 부재로 농가에 시장 정보 유입 난항 가능성 내재
 - CWB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수출 체제 하에서는 경작 및 생산 상황, 판매가격 등 정보의 수집·제공, 판매촉진, 브랜딩(branding), 시장개척, 고객관리, 농가 계발 활동¹⁰⁾ 활발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8.22., 2013.08.23)

10) 예를 들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나 우선적으로 경작해야할 작물의 정보 등임.

4. EU, 농가유형 연왕

□ 개요

- 지난 7월 EU집행위원회는 **농가구조조사(Farm Structure Survey, FSS)**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EU의 농업 현황 분석
 - FSS는 농업 노동력의 특성을 자세히 제공하는 최적의 자료로 농업경영체의 농지 면적, 주요작물, 가축, 경제적 규모, 농업활동별 유형, 기타 소득활동, 농업활동 구조, 기계, 유기농업 등 조사

□ 주요 내용

- **[농업인 현황] 약 천만 명으로 EU인구의 약 5%를 구성**
 - (조사 자료별) 농가구조조사(FSS): 980만 명, 농업경제계정(EAA): 1,001만 명, 노동력조사(LFS): 990만 명
- **[가족농 비중] 정규 농업노동력의 92.2%**로, EU의 농업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 **고용 노동력은 7.8%**에 불과, 비가족 정규 노동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체코(67.6%), 슬로바키아(49.4%), 프랑스(44%)등
- **[소규모 농업경영체 종사자 비중]** 표준산출¹¹⁾이 4천 유로 미만인 농업 경영체에 종사하는 농업인 비중은 **EU 평균 53.1%**
 - 소규모 경영체 농업 종사자 비중이 70% 이상인 국가는 루마니아(83%), 불가리아(77.7%), 헝가리(74.3%), 몰타(69.9%) 등이며, 20% 미만인 국가는 독일(1.6%), 네덜란드(1.8%) 등 약 10여 개국
- **[전업농 비중] EU 27개국 평균 14.3%**에 불과, 전업농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체코(60.4%), 룩셈부르크(53%), 벨기에(53%), 프랑스(52.2%) 등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07.31)

11) 표준산출(Standard Output): 상이한 농가별 소득을 표준으로 산출한 것임.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9월 23일~2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농식품부, 수출 확대 방안 보고...제2 파프리카 프로젝트 착수

- 농식품부, 9.25일, **농수산물 수출 확대방안 발표**, 대표적인 수출 성공 품목인 파프리카*를 벤치마킹해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제2 파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 **을 통해 **국가별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발굴**...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현재) 13개 → (’ 17년) 23개 확대, 현재 단순한 잔류농약 검사만 시행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수출전담 안전팀’ 신설해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컨설팅 지원. ▲ **첨단 융복합형 수출농어업 기반 마련**...수출형 첨단온실 신축 확대, 고부가가치 수산물품 양식단지 조성 등. ▲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비관세장벽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추진 체계 구축, ‘위생기준 국제조화 사업단’을 통해 국가별로 다른 위생 기준 문제 해소, 하반기 중 신규 환변동보험의 지원대상 확대, 무역보험 공사와 협의해 보험상품 다양화 추진
 - ※ 파프리카는 현재 국내 생산의 40% 이상 수출, 일본 수입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효자품목
 - ※※ 현지인 선호품목 등 시장조사, 국가별 수출품목 선정, 품질·가격 등 국내 경쟁력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운영
-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9.25.) / 국민일보(2013.9.26.)

□ ‘국외 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김우남 의원, 9.16일, **정부의 일방적 FTA체결 통제·후속조치점검·효율적 대책 마련** 위해 **‘국외 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총 교역액이 한·미 간 교역액의 2배가 넘는 사상 최대 FTA임에도 정부·국민·국회 소통·논의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협상 강행으로 이미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 이와 함께 한·미, **한·EU FTA 등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새정부는 오히려 내년부터 매년 1조3,000억 원씩 4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농어업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해 FTA에 대응해야 하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면밀 분석, 정부의 한·중 등 FTA 체결과정 투명 공개, 취약분야인 농어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의한 FTA 추진 등 당위성 강조

※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EU,미국 등 47개 국가와 FTA가 체결 또는 발효됐으며, 중국 등 27개 국가와 협상 진행 중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9.23.)

□ 농식품인증제 ‘소비자 혼선’

- 장기적으로 성격·기능이 유사한 국가농식품인증제 **인증표시**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단순화, 인증표지 크기 확대 부착**하는 등 **국가농식품인증제 개편 시급**. 농식품관련 국가인증공통표시는 유기농식품, 유기농, 무항생제, 무농약, GAP, 전통식품, 지리적 표시제, 식품명인 9개로 사용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인증표시로 인해 소비자 혼란 증가**. ▲농식품부, 2012년 총 16개 인증제도에서 9가지 형태인 하나의 공통표지인 ‘초록색사각표지’로 일원화. 하지만 현재 9개 달하는 농식품인증 표시에 대한 소비자 혼선으로 대책마련 요구. ▲**인증제도 기능성격별 통합**…현재 농식품관련 인증제 9개 표시를 유사한 기능·성격별 구분 통해 단계적으로 4~5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방안* 제시, 인증제를 인증목적별로 구분한 후 인증절차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한국농식품표준제도 도입 검토, 이를 통해 **인증절차 관리 용이**, 유사한 인증제도임에도 **별도 인증기관에서 관할함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 절감**

※ 중장기적으로 농식품인증제도를 크게 안전인증, 품질인증, 정보제공, 특성보증 등으로 구분해 유사한 기능의 인증제도 통합 관리가 바람직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9.26.)

□ HACCP 인증 품목서 이물질 검출 계속…처벌은 ‘시정명령’ 뿐

- 이목희 의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햇썬(HACCP) 지정 품목 이물질 검출 사례’에 따르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품목에서 이물질 계속 검출**…(‘08년) 17건 → (‘09년) 21 → (‘10년) 57 → (‘11년·‘12년) 각각 53 → (‘13.6월 말 현재) 27. ▲**이물질 검출 유형 다양**…삼각김밥에서 플라스틱, 김에서 비닐 검출, 같은 품목서 2~3회

금속·벌레 등이 나오기도 해. ▲**이물질 검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정품목 확대에 급급*, 사후관리 소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시·군·구는 HACCP 지정품목에서 금속·동물 등의 이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2010년 이후 16개 업체의 품목에서 금속과 동물이 검출됐음에도 **시정명령에만 그쳐**
 ※ HACCP 지정품목수…(‘08년) 475개 → 올해 상반기 3,723개로 약 9배 증가, 2020년까지 전체 가공식품의 50% HACCP 지정한다는 계획

자료 : 농민신문(2013.9.23.)

□ 돼지가격 당초 예상보다 상승 전망

- 전국 13개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추석 직전인 **9.14일 지육kg당 3천991원(박피기준)**.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9.13일 대비 300원 하락하면서 3천 원대**. 돼지가격은 **5.30일부터 4개월여 가까이 4천 원 이상**에서 거래. 특히 추석을 2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일주일 앞두고서야 약세. **일본 원전 방사능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축산물로 수요 대체**. 유통업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은 축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시기인 만큼 돼지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 원전의 **방사능 파문의 여파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 **추석 이후에도 당초 예상**을 넘는 **돼지가격 전망**

자료 : 축산신문(2013.9.25.)

□ 국제 곡물 재고율 상승…값 하락 전망

- 미국 농무부(USDA),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 **국제 곡물 가격 하락 전망**.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세계 곡물시장의 총 재고율은 **19.5%***, 밀 재고율 24.5% → 25%, 옥수수 16.1% → 16.3%로 각각 상승 전망. 다만 콩은 같은 기간 26.9% → 26.6%로 0.3%포인트 하락 예상. 밀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옥수수는 미국에서 생산량 급증해 곡물 가격 하락 전망.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평균 옥수수 가격이 1년 전보다 33.3%, 밀은 11.4%, 콩은 26.6% 각각 하락 예상

※ 이는 미 농무부가 8월 말 내놓은 19.3%보다 0.2%포인트 ↑

자료 : 농민신문(2013.9.25.)

□ 산림청, 한·중 FTA서 임산물 보호 ‘늑장대응’

- 산림청, 1단계 협상 완료 후 9.16일, 보호방안 마련 밝혀 한·중 FTA에 대한 산림청의 뒤늦은 대응에 임업계 반발. ▲산림청...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임산물 중 많은 부분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 높고,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품목은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관세의 보호를 받도록 협상할 계획. ▲임업계...산림청이 한·중 FTA 협상에서 임산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 그동안 구체적인 대책 제시하지 못하다 한·중 FTA 1단계 협상 끝난 후 임산물 보호한다고 뒤늦은 한·중 FTA 대응책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어. 임업인들의 세심한 의견수렴 거쳐 임산물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9.26.)

□ 설탕 관세 딜레마

- 기획재정부, 3년제 설탕 관세 인하 추진하면서 농식품부·설탕업계가 기초산업 보호를 요구하며 반발
- ※ 기재부는 2011년 설탕 기본관세를 35% → 30%로 인하, 2012년 30%에서 5%로 대폭 낮추려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
- (기재부) 독과점 산업인 설탕업계에 경쟁 필요하다는 입장. 이를 통해 물가 안정 효과 기대
- 9.23일, 설탕 기본관세 30%를 잠정관세* 20%로 대체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 차관회의에 상정(9.26일), 이견을 보이는 농식품부와 막판 조율 중
- ※ 관세의 하한선을 정하고 산업에 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제도
- 현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회사 설탕 공급 독과점
- ※ 3개사는 2007년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가 당국에 적발되기도 함.
- (설탕업계)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설탕을 기초산업으로 보호 강조
- ※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설탕 기본관세가 50% 이상이란 점 근거
- (농식품부) 설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

<각국의 설탕 관세율(단위, 100%)>



자료 : 서울신문(2013.9.24.)

※ 본 자료는 2013년 9월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녹색생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녹색생활조사]**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및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이후 2년 주기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전국 9,72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20세 이상 가구원 약 19,000명
- **[녹색생활지표]**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및 인식을 보여 주는 실천지표와 우리나라의 녹색생활 실천성과를 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구성

□ 친환경

1) 환경 관련 표지 인지

- **[환경마크* 인지]** 인지비율은 40.9%, 2011년 대비 0.5%p 증가
 - ※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착
 - 환경마크를 인지하는 사람 중 77.7%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
- **[탄소성적표지* 인지]** 인지비율은 31.8%, 2011년 대비 3.8%p 증가
 - ※ 물품의 생산에서 구매까지의 전(全)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표시
- **[탄소포인트제도* 인지]** 인지비율은 24.6%, 2011년 대비 5.2%p 증가
 - ※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2) 친환경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 구매]** “노력 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52.5%, 2011년 대비 4.4%p 감소
 - (노력 비율) 여성(58.0%) > 남성(46.7%), 도시지역(53.3%) > 농촌지역(48.8%)
- **[친환경 농산물 구매 방해 요인]** “가격이 비싸다” 7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믿기 어렵다” (55.0%), “구별이 힘들다” (37.3%) 순
- **[지역농산물 구매*]**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 한다” 비율은 43.9%, 2011년 대비 2.7%p 감소
 - ※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함으로써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
 - (노력 비율) 농촌지역(60.5%) > 도시지역(40.3%)
- **[식품 첨가물* 확인]** “확인하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56.6%, 2011년 대비 0.5%p 증가
 - ※ 감미료, 방부제, 화학조미료 등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

□ 환경문제

- **[기후변화 영향 인식]** 20세 이상 인구의 83.8%는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 2011년 대비 1.5%p감소
 - (심각성 인식 비율) 도시(84.0%)지역 > 농촌(82.9%)지역
- **[생활습관과 환경 훼손]** 20세 이상 인구의 92.9%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때문에 환경이 훼손된다고 생각
 - (연령별) 30대와 50대가 94.7%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이 8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의 기회요인]** 20세 이상 인구의 83.8%는 “환경문제 심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
 - (연령별) 40대가 88.0%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이 7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녹색생활 성과지표

분야	관심영역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2)	최근 추세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1)		
녹색 가정	1. 친환경 상품 구매 인프라	환경마크 인증제품(개)	5,105	6,005	6,531	7,904	7,777	9,140	9,803	+	↗
		친환경 농산물(채소) 생산비율(%)	8.3	10.5	11.0	12.6	8.3	7.8	-	+	↗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탄소성적표지 제품(개)	-	-	111	301	511	807	1,022	+	↗
		1인당 가정·상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toe3))	0.739	0.740	0.726	0.754	0.754	0.762	-	-	↘
	3. 자원절약 및 재활용확 대	1일 1인당 물 사용량(ℓ)	340	337	332	333	335	-	-	-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7.8	59.8	61.1	60.5	59.1	-	-	+	↗
	4.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량	1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kg)	0.30	0.31	0.29	0.28	0.27	-	-	-	↘
		1일 1인당 생활폐기물4) 배출량(kg)	1.04	1.06	1.04	0.99	0.98	-	-	-	↘
녹색 교통	5. 자동차의 경제적 이용습관 정착	1인당 수송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toe)	0.763	0.731	0.731	0.748	0.741	0.743	-	-	↘
		자가용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km)	40.9	35.5	35.7	34.2	32.6	-	-	-	↘
	6.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경차 등록비율(%)	6.3	7.5	7.9	8.3	8.9	9.6	9.8	+	↗
		그린카 등록비율(%)	0.00	0.03	0.08	0.14	0.30	0.52	0.62	+	↗
녹색 커뮤 니티	7. 녹색생활 운동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가입비율(%)	-	-	4.2	9.6	14.1	16.2	17.7	+	↗

주: 1) 2013년 자료는 6월 말 기준임.

2) 지표값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변화이면 (+), 감소할수록 긍정적 변화이면 (-)임.

3) 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의 가치를 석유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4)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수치임.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